

# 글로벌시대의 보호무역에 대한 경제적 비용분석과 정책 시사점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지역통상팀 선임연구위원  
ngchoi@kiep.go.kr

**박순찬** 공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spark@kongju.ac.kr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협력정책실  
다자통상팀 전문연구원  
jgkim@kiep.go.kr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8년 세계경제위기가 발생한 이후 주요국에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추세임.
  - 미국, 중국, 유럽 등 거대경제권 국가들은 Buy American 조항<sup>1)</sup>의 도입 등을 통해 국제규범을 위배하지 않는 가운데, 자국산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수입 억제를 유도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음.
  
- 현재 세계무역을 규율하는 WTO 체제는 관세 이외의 보호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세는 거치(binding)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조달 등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가 널리 확산됨.
  - WTO 등 국제기구의 최근 발간된 자료에 따르면 전통적인 보호조치는 감소하는 대신 금융 등 정부지원수단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울 때 수입억제를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국내정치적으로 지지를 받게 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보호주의의 확산은 세계무역을 위축시키면서 경제위기도 더욱 악화시킴.
  - 지난 1930년대에 주요국들은 세계공황에 따라 국내경기가 위축되자 앞다퉀 수입을 규제하였음. 특히,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도입하고, 당시 2만 개 이상의 수입품에 대해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보호한 바 있음.
  -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국내 산업을 보호하면서 결국 세계공황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세계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호주의는 막아야 된다는 역사적인 교훈을 주고 있음.

1) 미국의 자국 상품구매 촉진정책.

- 이에 따라 최근 들어 보호무역조치 억제를 위한 국제적 공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보호주의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15년까지 미국 수출을 2배 증가시킨다는 목표하에 국가수출전략(NEI: National Export Initiative)을 발표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은 FTA, DDA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보호무역장벽을 감축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도 적극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우리나라는 G20 회의에서 보호주의를 동결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보호주의 억제를 정식 의제로 채택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바 있음.
  - WTO, OECD, IMF 등 주요 국제기구도 보호주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회원국간의 상호 토론과정을 통해 보호주의에 대한 검증절차를 강화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보호주의에 대한 지대한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존 문헌을 보면, 관세, 쿼터 등 WTO에 의해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보호주의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음.
  - 그러나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조치, 그리고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상 기술장벽) 등 WTO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보호주의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연구는 축적되어 있지 않음.
  - 또한 비관세장벽에 대한 개념이 변화함에 따라 통일된 국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아서 비관세장벽에 대한 유형별·산업별 분석도 적음.
  - 아울러 보호주의가 확산되면 산업활동이 결과적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따라 국내고용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보호무역조치의 경제적 비용을 구체적 수치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개방도를 제고하고 정책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구체적으로는 무역구제조치 및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과 더불어 기술장벽 등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경제적 효과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보호주의가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함.

## 2. 조사 및 분석 결과

### 1) 보호주의의 현황

- 본 연구는 보호조치를 넓게 정의하여 외국기업 및 물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국내외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음.
- 또한 UNCTAD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분류방식을 이용하되, 보호주의조치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즉 (1) 관세, (2)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3) 가격조치(유사관세, 가격통제조치 등)와 비가격조치(금융조치, 수량제한조치, 독점조치 등)를 포함하는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 (4) 기술조치(SPS, TBT, 선적전 검사 등)와 제도적 조치(무역관련조치, 유통제한, 판매후 서비스제한, 정부조달제한, 지식재산권, 원산지규정 등)를 포함하는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함.
- 먼저 세계관세율 추이를 보면 1996년 평균 10.47%이던 실행세율은 2006년 이후 7%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1. 세계 관세율 추이

(단위: %)

연도	실행세율 평균	표준편차
1996	10.47	15.47
2000	10.47	25.73
2005	8.20	27.47
2010	7.20	12.27

자료: WTO, Integrated Data Base.

- 무역구제조치의 경우 1990년대 중반까지 수십 건에 불과하던 발동건수는 1990년대 후반 이래 급증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그 밖의 비관세장벽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90년대 후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2. 조치별 무역구제조치 추이

(단위: 건수)

연도	반덤핑	세이프가드	대중국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총계
1980	4	-	-	1	5
1985	20	-	-	18	38
1990	33	-	-	4	37
1995	55	-	-	11	66
2000	118	8	-	10	136
2005	79	9	-	4	92
2010	83	4	-	16	103

자료: World Bank, Temporary Trade Barrier Database.

- 기술조치, 제도적 조치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이 널리 확산되면서 보호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표 3. 조치별 비관세장벽 추이

(단위: 건수)

연도	가격조치	비가격조치	기술조치	제도적 조치	총 건수
1980	-	93	1,634	-	1,727
1985	-	236	375	801	1,412
1990	2	636	834	-	1,563
1995	331	2,213	3,669	28	6,354
2000	129	4,433	9,410	36	14,453
2005	1,857	5,903	11,641	277	19,919
2010	13	4,672	360	-	5,072

자료: UNCTAD, TRAINS 데이터베이스.

- 이에 따라 세계경제위기 이후 국제무역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WTO, G20, APEC 등 국제회의에서 주요국들은 무역과 투자장벽을 높이지 않고, 새로운 수출제한을 부과하거나 WTO 규정과 불일치하는 수출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
-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따라 최근까지 WTO와 GTA 등 주요 기관의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WTO 회원국은 국내 보호조치 압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 보임.

## 2) 보호무역수준 및 무역원활화 효과

- 2000년과 2010년 기간 중 주요국의 보호무역수준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해 보면, 주요국 관세율의 단순평균치는 2000년 10.9%에서 2010년에는 8.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국의 보호무역수준 역시 2000년의 19.7%에서 2011년에는 11.0%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주요 경제권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선진국 및 유럽권의 경우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을 모두 고려한 보호무역수준은 2000년의 평균 18.6%에 비해 2010년에는 7.0%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아시아 주요국의 경우 2000년에 비해 2010년에는 중국(19.2%), 인도네시아(10.9%) 등의 보호무역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파키스탄(16.1%), 인도(14.0%), 한국(15.2%)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2010년 보호무역수준이 세계관세율 하락과 FTA 확산 등 전 세계적인 자유화 추세로 인하여 2000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됨.

- Kee *et al.*(2010)에 의하면 세계경제위기 기간 중 무역정책의 변화에 따른 충격은 매우 적은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

■ 보호주의의 새로운 형태로 지적되고 있는 통관절차 등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변수들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수입 일수를 제외한 모든 계수의 값이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교역대상국의 무역원활화 관련 지수가 개선되면 주요국의 수출이 크게 개선됨을 의미함.

- 무역원활화와 관련된 비용은 수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대부분 반영된다고 보면, 무역원활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체적으로 1~1.5% 정도의 수출감소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

### 3) 보호조치의 유형별 영향

■ 보호조치를 무역구제조치, 기존 유형 및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 등 유형별로 분석하면 비관세장벽은 무역을 감소시키지만, 비관세장벽의 유형별 영향은 강도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반덤핑관세의 경우,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반덤핑조치가 가지는 무역억제효과가 뚜렷하다는 기존문헌의 연구결과와 일치함.

- 또한 SPS, TBT 등 최근 들어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비관세장벽(NTM\_NEW)은 무역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추정결과는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제도운영의 투명성(SPS), 과학적 근거(TBT), 수출이행의무 부과 금지(무역관련투자협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억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NTM\_OLD)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남. 즉, 일부 결과는 추정부호가 플러스이지만 다른 결과는 마이너스이며 통계적 유의성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WTO 출범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수입금지적인 형태로 비관세조치를

표 4. 유형별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수출 영향 분석

연도	무역구제 조치	반덤핑 관세	종전 유형	가격조치	수량조치	새로운 유형	기술 조치	제도적 조치
비관세장벽 대상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백만 달러)								
1996	9,037.4	9,037.4	1,539.7	1.7	1,538.0	2,592.7	2,446.2	146.7
2000	4,805.8	4,780.8	3,936.0	857.0	3,080.2	9,785.0	9,433.4	572.9
2005	6,114.3	2,261.9	1,837.4	5.8	1,831.7	2,373.0	1,993.3	393.3
2007	5,362.1	1,542.9	6,551.8	3,726.7	3,204.7	17,299.3	16,844.3	492.1
2008	4,009.8	1,475.5	9,162.1	4,620.8	5,053.2	20,781.4	20,777.1	4.3
2009	287.9	136.8	8,689.7	3,380.5	5,726.3	54,731.2	54,727.2	4.0
2010	191.9	191.9	1,824.4	0.0	1,824.4	41,232.7	41,232.7	0.0
비관세장벽 대상 수출이 우리나라의 해당제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1996	13.89	13.89	2.37	0.00	2.36	3.99	3.76	0.23
2000	3.30	3.29	2.71	0.59	2.12	6.73	6.48	0.39
2005	3.20	1.18	0.96	0.00	0.96	1.24	1.04	0.21
2007	1.81	0.52	2.21	1.26	1.08	5.83	5.67	0.17
2008	1.24	0.45	2.82	1.42	1.56	6.40	6.40	0.00
2009	0.18	0.09	5.50	2.14	3.62	34.62	34.62	0.00
2010	0.32	0.32	3.03	0.00	3.03	68.49	68.49	0.00

자료: UNCATAD의 COMTRADE와 TRAINS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필자 작성.



발동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유형의 비관세장벽이 가지는 무역억제적인 효과가 WTO 체제하에서 상당히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우리나라의 해당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무역구제조치 대상품목의 수출 비중은 1996년 13.89%에 달했으나, 2000년에는 3.3%로 낮아졌으며, 2010년에는 0.32% 수준까지 떨어졌음.
  - 이에 반해 가격조치와 수량조치 등 기존에 주요국들이 비관세장벽으로 널리 운영하던 조치들의 수출액과 수출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기술조치와 제도적 조치 등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된 우리나라의 수출액 및 비중을 분석해 보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의 산업별 수출액 및 수출비중을 분석해 보면, 산업별로 비관세장벽의 유형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음.
  - 농업, 고기·과일·채소, 기타음료·담배, 석유정제, 자동차, 축정·정밀기기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 수출품이 주요국의 비관세장벽 대상이 되는 비중이 높음.
  - 제조업 수출제품은 대부분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수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컴퓨터와 철강제품의 경우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대상이 되는 수출비중이 여타 유형의 비관세장벽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보호주의는 유형별로 영향의 강도가 상이하지만 대체적으로 무역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최근 널리 확산되고 있는 반덤핑관세 등과 같은 무역구제조치는 직접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수출의 산업별 분석

산업	수출액			수출 비중		
	무역구제조치	종전 유형	새로운 유형	무역구제조치	종전 유형	새로운 유형
01.농업		187.4	390.8		29.33	61.16
02.광업		0.0	22.5		0.00	5.00
03.고기·과일·채소	8.5	422.0	89.7	0.71	35.16	7.47
04.기타음료·담배		288.1	127		27.84	12.27
05.제사·방직	0.3	7.5	78.5	0.01	0.35	3.69
06.직물		12	113.9		0.66	6.30
07.기타섬유		42.1	64.6		2.37	3.63
08.의복		17.6	36		2.45	5.01
09.가죽·가방·신발		2.5	24.5		0.29	2.82
10.목재		0.1	1.7		0.10	1.69
11.펄프·종이	0.0	10.5	36.8	0.00	0.60	2.09
12.인쇄		5.7	4.2		1.37	1.01
13.석유정제		4,068.3	4,197.6		17.11	17.65
14.화학	398.7	691.1	3,229.0	1.06	1.83	8.56
15.고무플라스틱		161.6	503.3		2.05	6.37
16.비금속광물	0.0	0.4	4.7	0.00	0.03	0.31
17.철강	1,057.9	4.8	441.1	5.42	0.02	2.26
18.비철금속		1.4	43.3		0.02	0.65
19.금속제품		37.8	250.7		0.52	3.43
20.일반기계		45.6	347.2		0.42	3.16
21.공작기계	18.7	76.5	638.1	0.11	0.45	3.75
22.컴퓨터	2,407.6	131.4	311.1	25.12	1.37	3.25
23.전기장비	118.1	85.2	733.4	0.93	0.67	5.76
24.반도체		25.4	26.8		0.06	0.06
25.통신기기		293.3	4,741.3		0.66	10.68
26.의료기기	0.0	59.4	198.2	0.00	2.00	6.69
27.측정·정밀기기		0.9	2,564.7		0.00	11.87
28.광학기기·시계		0.0	0.8		0.00	2.00
29.자동차		2,467.2	1,463.8		7.96	4.72
30.선박·철도		0.3	1		0.00	0.01
31.기타 운송장비		0.3	3.3		0.04	0.49
32.기타 제조업		15.5	91.8		0.24	1.40

주: 산업분류는 최낙균 외(2011)의 제4장 2절 참고.

자료: UNCATAD의 COMTRADE와 TRAINS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필자 작성.

#### 4)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 효과

- 우리나라의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1991~2006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3-digit)로 분류된 55개 제조업을 대상으로 관세율 수준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동태적 패널 분석방법으로 분석함.
  - 분석결과에 따르면 관세율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수준에 달려 있는데, 관세율 증가로 표현할 수 있는 보호주의가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에서만 가능함. 반대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 보호주의로 인한 고용의 증감 여부는 임금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임금수준의 임계치는 분석기간에 포함된 전체 산업의 평균임금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음.
  - 이는 평균임금 이하인 산업에서만 보호주의가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평균임금 이상인 산업에서는 보호주의가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함.
  - 다시 말해서 보호주의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오히려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거꾸로 시장개방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 또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여 관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외환위기 이후 무역자유화 또는 보호주의가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관세율이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임금수준의 임계치는 전체 기간의 임계치와 비교하여 높아졌는데, 이는 개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외환위기 이후에 더욱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함.

■ 아울러, 본 연구는 보호주의에 대한 이질적인 노동의 반응도 또한 서로 다르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노동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여 보호주의가 각각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관세율이 생산직 노동의 고용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무직 노동의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하였음.

■ 이는 제조업의 관세율은 생산직 노동과 관련이 크고 사무직 노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서비스 오프쇼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무직 노동은 서비스 오프쇼링과 더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sup>2)</sup>

-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생산직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 관세율 감축이 생산직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증거를 발견하였음.

■ 또한 산업을 기술수준에 따라 고기술 산업과 저기술 산업으로 분리하여 무역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고기술 산업에서 무역정책의 변화는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저기술 산업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음. 이는 고기술 산업에 대한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매우 높은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시사함.

■ 이상의 연구결과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호주의적 정책을 채택한다면 정책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함.

- 다시 말해서 본 연구는 보호주의는 오히려 임금수준이 높은 그리고 고기술

2) 박순찬(2009)은 서비스 오프쇼링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무직 노동 고용을 증가시켰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보호주의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무직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3. 정책 제언

#### 1) 경기회복정책의 국제규범에 대한 합치성 제고

- 세계 주요국들은 세계경제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경기회복방안을 추진함.
- 이에 따라 주요국들이 농업 및 취약 제조업을 지원하고 노동자 및 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역제한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세계경제위기가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졌음. 이는 보호주의가 다른 나라의 보복조치를 촉발할 수 있으며 세계경기 침체도 더욱 심화될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차별적인 경기회복방안을 추진하지 말아야 하며 다음과 같이 경기회복정책을 국제규범에 합치되게 운영해야 함.
- 첫째, 국내의 경기회복정책은 차별적이지 않아야 하며, WTO의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및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함.
- 특히 주요국들은 경제의 특정 부문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지 말아야 하며, 외국기업에 비해 국내소유 기업을 우대하지 말아야 함. 아울러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서비스와 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 및 서비스를 차별하지 말아야 함.
- 둘째, 특정 부문에 대한 국내지원정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운영되

도록 명료한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가져야 하며, 해당 정책의 종료일자가 명시되어야 함.<sup>3)</sup>

- 아울러 특정부문에 대한 지원은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에 한정되어야 함.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재취업시키고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일치되는 국내정책을 추진해야 함.
- 셋째, 현행 WTO 체제하에서는 허용된 양허세율(bound tariff rate)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행세율(applied tariff rate)을 인상하면 안 됨.
- 또한 WTO 협정에는 보조금, 반덤핑, 지식재산권, 무역관련투자협정, 기술장벽 등에 대한 무역규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적이며 무역왜곡적인 국내제도의 운영도 금지됨.
- 아울러, 양허세율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현행 세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실행세율을 높이지 말아야 하며, WTO에서 금지되지 않은 기술, 환경, 지역보조금을 무역왜곡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함.

## 2) 보호주의에 대한 국제공조 강화

- 보호조치 확산은 세계경기의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첫째, 비관세장벽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여 비관세장벽이 수입규제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WTO 회원국들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보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WTO 회원국들은 비관세조치를 UNCTAD의

3) OECD(2010c)의 p. 13 및 최낙균 외(2009)의 p. 186 참고.

TRAINS 데이터베이스에 자발적으로 등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함.

- 둘째, WTO 회원국 상호간의 견제 및 감시가 적절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보호조치에 대한 감시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가급적이면 포괄적이며 정확한 정보에 기초할 필요가 있음.

- 특히 WTO 회원국들은 다자간 무역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집단적인 책임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무역정책검토(TPRM)의 G항에 나타나 있는 연례검토와 관련된 절차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음.

- OECD 국가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주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조치들은 WTO에서 통제되지 않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금융기관 및 자동차산업 등 특정 산업에 대한 각종 보증 및 국가지원조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셋째,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DDA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 농업과 제조업 분야의 관세감축방안에 대한 주요국간 합의가 절실함. 최근 우려되고 있는 보호조치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억제력을 위한 자유무역기조 정착이 필요함.

- 특히 다자차원의 무역자유화는 세계무역을 증대시키고 경제회복의 기회로 활용됨으로써 보호주의에 대한 국내적 유혹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음.

- 넷째, 보호주의의 동결 및 억제를 위한 정치적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행되어야 함.

- 2009년 우리나라는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을 금지한다는 보호주의 동결의 원칙, 즉 스탠드 스틸(stand-still)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WTO 협정에 대한

합치 여부와 관계없이 무역과 금융 등 모든 왜곡조치가 도입되면 안 된다고 G20에서 주장하였으며, 주장의 상당 부분을 관철함.

### 3) 고용확대를 위한 시장개방정책 추진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보호주의가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첫째, 보호주의는 임금수준이 높은 산업의 고용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함.
    - 보호주의가 우리의 일자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일반적인 믿음은 극히 제한적인 조건이 만족할 때만 성립될 수 있음.
    -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관세율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임금수준에 달려 있는데, 관세율의 증가로 표현할 수 있는 보호주의가 고용을 증가시키는 경우는 임금수준이 낮은 산업에서만 가능함.
  - 보호주의로 인한 고용의 증감 여부는 임금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임금수준의 임계치는 분석기간에 포함된 전체 산업의 평균임금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었음.
    - 이는 평균임금 이하인 산업에서만 보호주의가 고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평균임금 이상인 산업에서는 보호주의가 오히려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함.
    - 다시 말해서 보호주의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들고 오히려 임금수준이 낮은 일자리만 늘어나게 되며, 이는 최근 국내에서 논의가 활발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시장개방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 둘째, 대졸자의 사무직 고용확대를 위해서 보호주의가 도움이 되지 않음.



- 노동이 동질적이 아니라 이질적이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보호주의에 대한 이질적인 노동의 반응도 또한 서로 다르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노동을 생산직과 사무직으로 구분하여 보호주의가 각각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결과를 보면 관세율이 생산직 노동의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무직 노동의 고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함.
  - 이는 제조업의 관세율은 생산직 노동과 관련이 크고 사무직 노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인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서비스 오프쇼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무직 노동은 서비스 오프쇼링과 더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 셋째, 고기술 산업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호주의는 도움 되지 않음.
- 본 연구는 산업을 기술수준에 따라 고기술 산업과 저기술 산업으로 분리하여 무역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결과를 보면 고기술 산업에서 무역정책의 변화는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저기술 산업에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 이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보호주의적 정책을 채택한다면 정책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